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청와대, 국민 품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 모두에게 개방했습니다(2023년 4월말 기준 누적 방문객 334만명).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 권역 내부를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청와대를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차례

I 개혁	01 노동개혁	10
	02 교육개혁	12
	03 연금개혁	14
	04 정부혁신	16
II 경제	05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20
	06 원전 생태계 복원	22
	07 부동산 시장 정상화	24
	08 규제개혁	26
	09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28
	10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30
	11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32
	12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34

III 사회	13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38
	14 약자복지 강화	40
	15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42
	16 사회서비스 혁신	44
	17 필수의료 기반 강화	46
	18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48
19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50	

IV 미래	20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54
	21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56
	22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58
	23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60
	24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62
	25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64

V 외교 안보	26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68
	27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70
	28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72
	29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74
	30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76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해 왔으며,
의미있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개혁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3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시장경제 조성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복지와 마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로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보훈문화가 국격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I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

안보

노동개혁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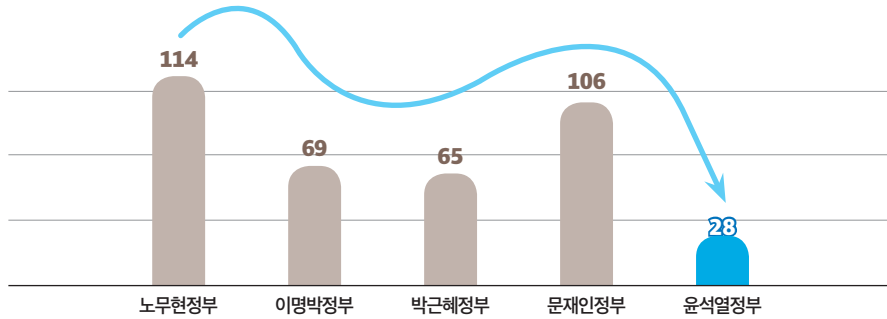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입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2.12.21)

무엇이 문제였나?

▶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열악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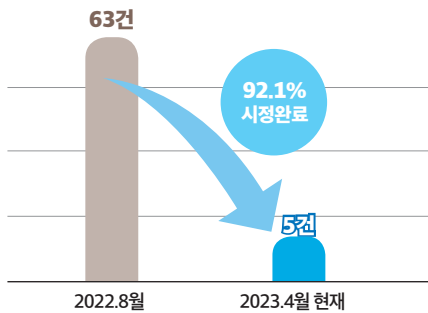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정부 출범 초기(5.10 ~ 익년 4월말) 근로손실일수(단위: 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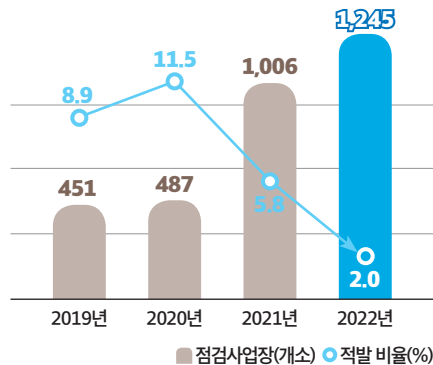
고용세습 단체협약 대폭 개선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현황



채용절차법 준수율 2배 이상 개선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조합 회계 서류 보존 의무 유명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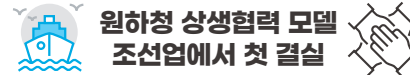
실효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334개)

미제출 단체 52개소에 과태료 부과
42개소 현장조사

1. 노조 회계 공시 제도 도입
2. 회계감사원 전문성, 독립성 확보
3.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4.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최소화
2. 숙련 중심의 임금체제로 개편
3. 안심결제 도입 등 임금체불 예방
4. 상사업무 재하도급 최소화 등 일자리 질 제고
5. 사회보험료 납부 지원방안 모색



4년후 청사진

- 불법·부당 노사관행
- 노조 회계 불투명
- 노동시장 이중구조

2022년

- 노사법치 확립
-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 안전한 근로환경

20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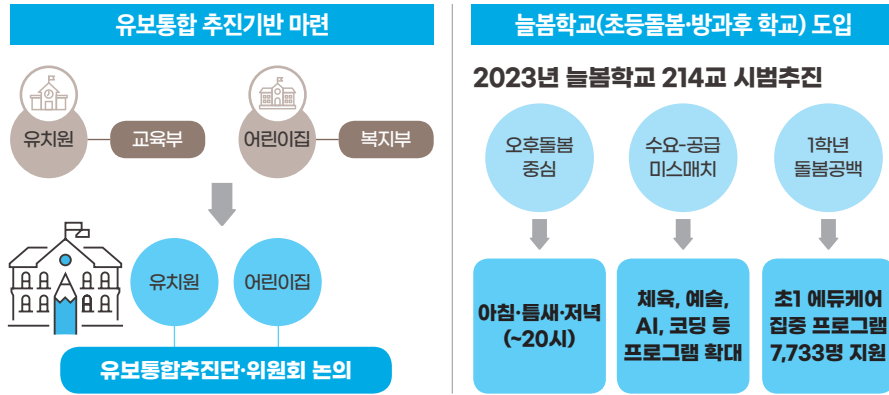
I 개혁 교육개혁

02 “교육을 사회변화에 맞추고,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추어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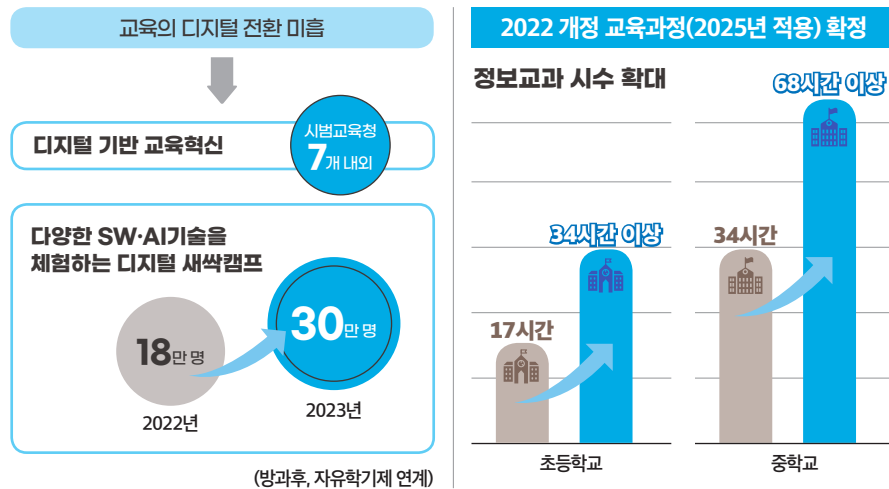
무엇이 문제였나?

▶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 등으로 디지털 시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유·초등]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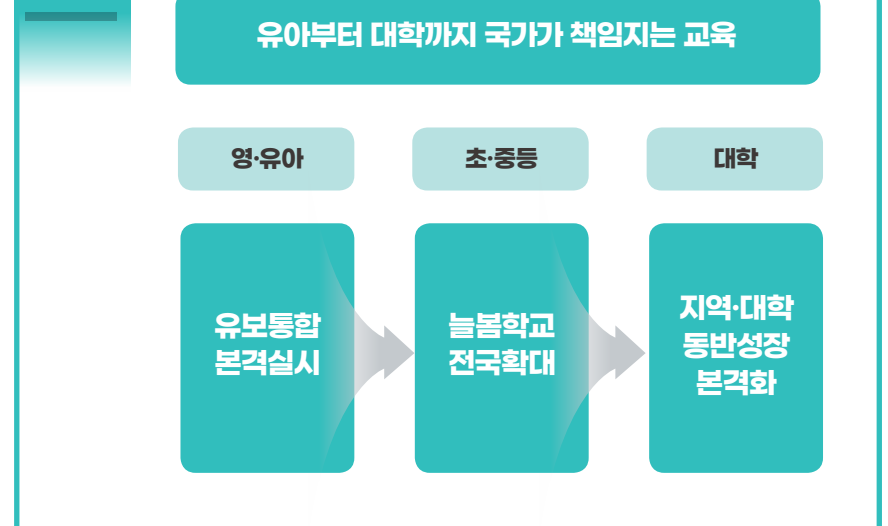
[초·중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지역중심 대학개혁



4년후 청사진



연금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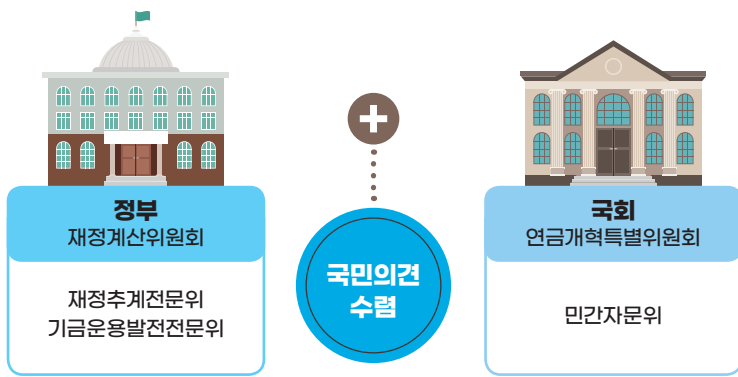
03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며,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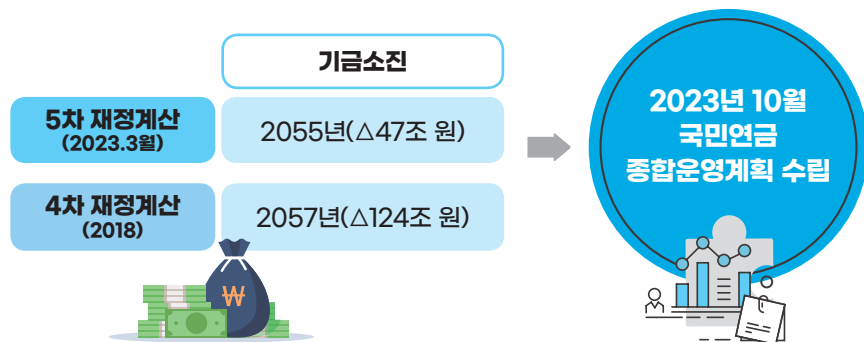
무엇이 문제였나?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연금고갈 시계가 빨라지며 미래세대의 연금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손놓고 있었습니다.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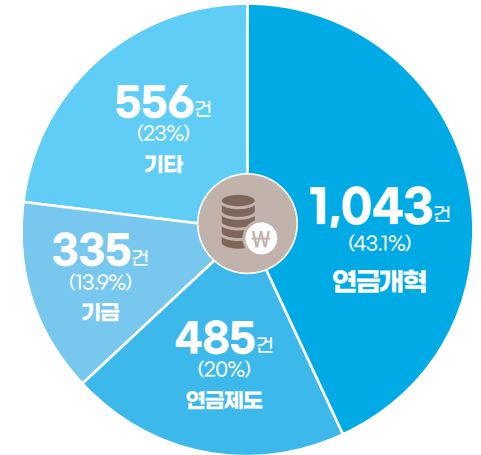
기금소진 시점 2년 앞당겨져 개혁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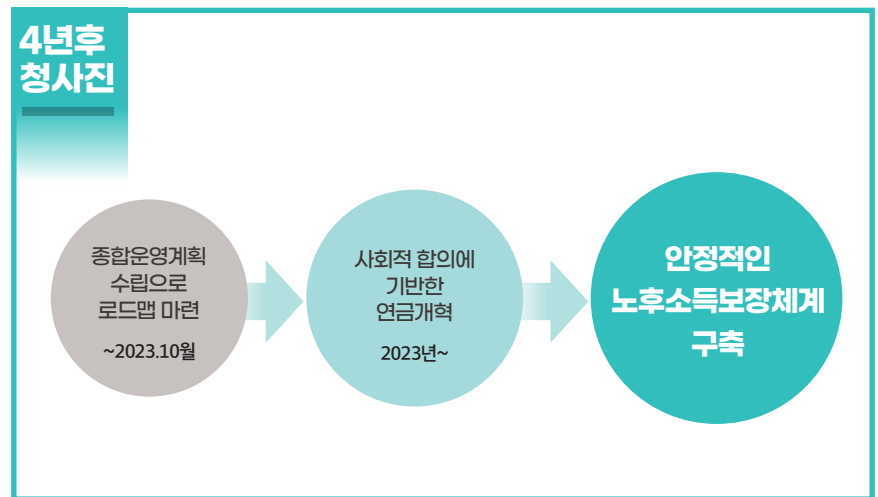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백지광고 통한 국민 의견수렴

각계각층 의견 청취



4년후 청사진



정부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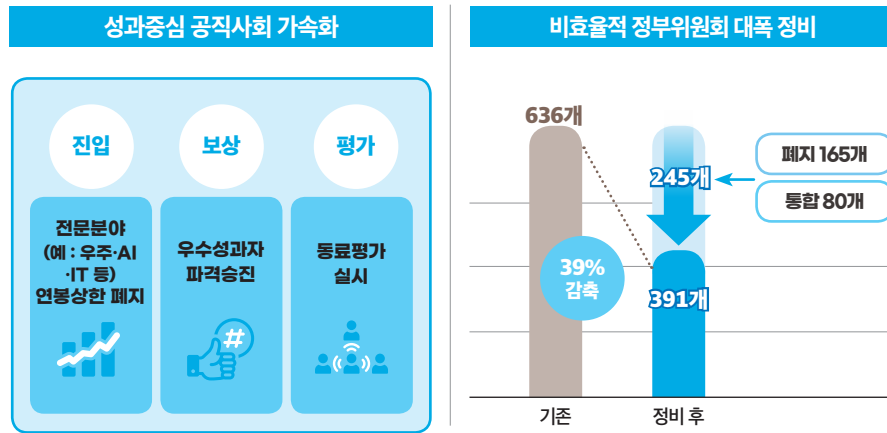
04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2.7)

무엇이 문제였나?

▶ 디지털 시대 가속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경직된 공직문화 및 전문성 부족, 부처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 등이 누적되며 정부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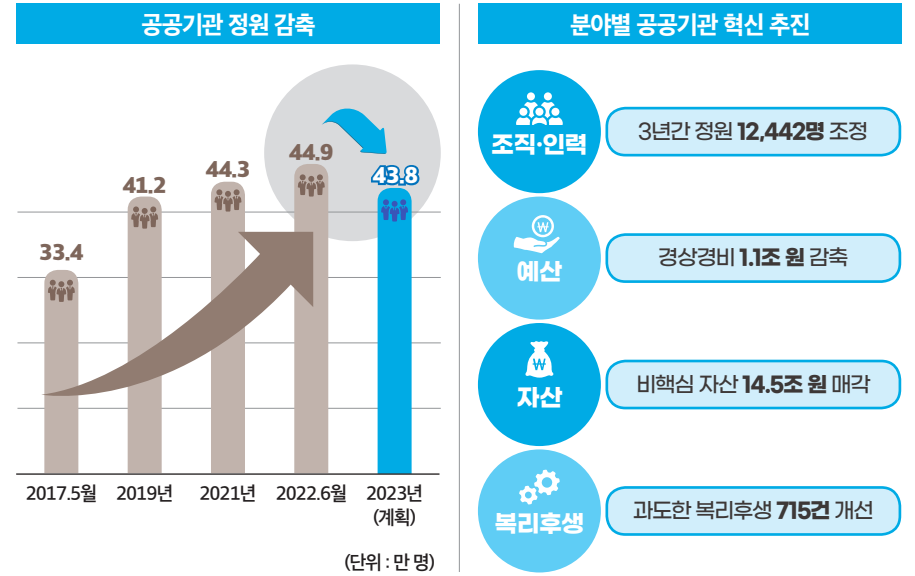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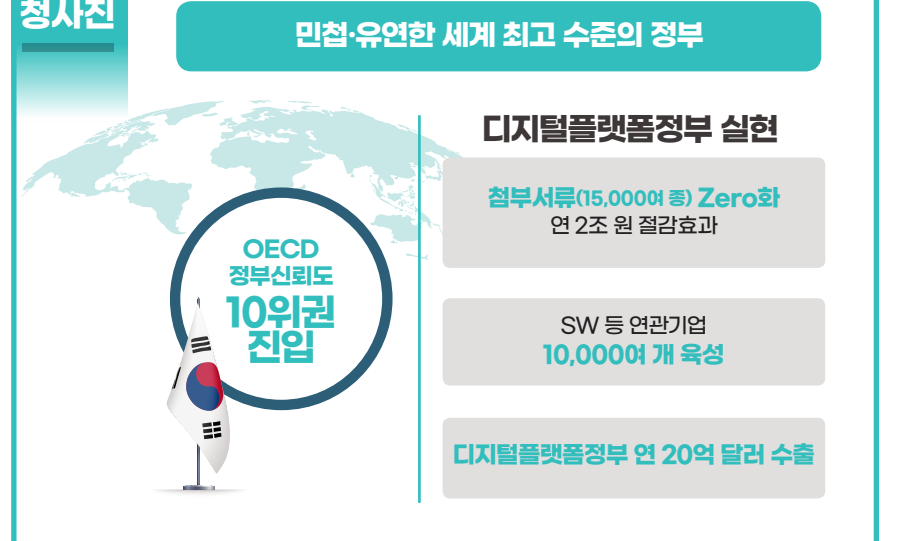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4년후 청사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개혁

II 경제

사회

미래

외교
안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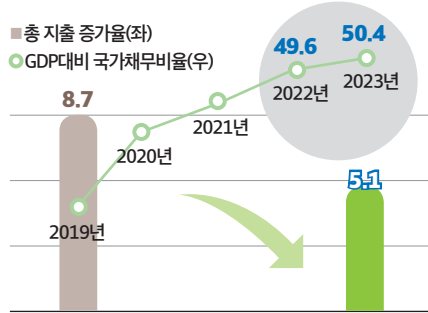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무엇이 문제였나?

▶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정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국가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건전재정 기초 확립 및 세부담 완화

총지출 증가 억제 → 국가채무비율 안정적 관리



*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단위: %)

투자촉진과 민생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1. 투자촉진 세제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5→24%(△1%p))
- 반도체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 만에 한시 재도입
- * 기본공제를 상향(2~6%p), 투자증분공제를 상향(7%p)

2. 민생회복 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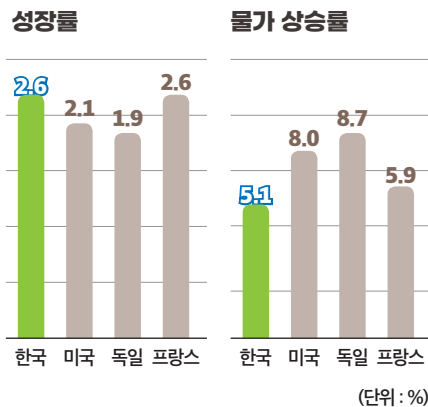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율	6%	15%	24%	35% 이상	
기존	-1,200	1,200~4,600	4,600~8,800		동일
개정	-1,400	1,400~5,000	5,000~8,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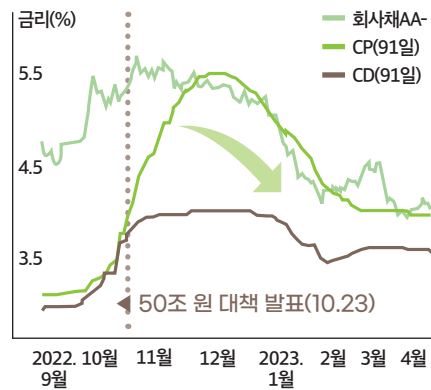
(단위: 만 원)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률·물가상승률 (2022년)



금융시장 리스크 안정적 관리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전망(2022년)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대외 리스크 적시 대응



4년후 청사진

경제 재도약 통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h3>거시경제 안정적 관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재정 기초 강화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관리 	<h3>민간중심 활력제고</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활성화 • 투자 촉진 • 규제혁신 	<h3>민생경제 회복</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 • 생계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지원 강화 	<h3>미래대비 체질개선</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경제혁신 • 인구·기후위기 대응 • 경제안보 강화 • 상생·지역균형 발전
---	--	--	---

원전 생태계 복원

06

“정부는 원전 생태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2022.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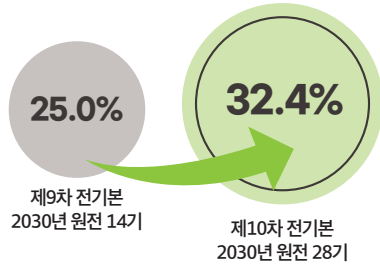
무엇이 문제였나?

▶ 지난 정부는 이념화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원전 등 에너지 정책방향 재정립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안전성 전제 계속운전 추진

원전 비중 변화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신한울 3·4호기 주기 공급계약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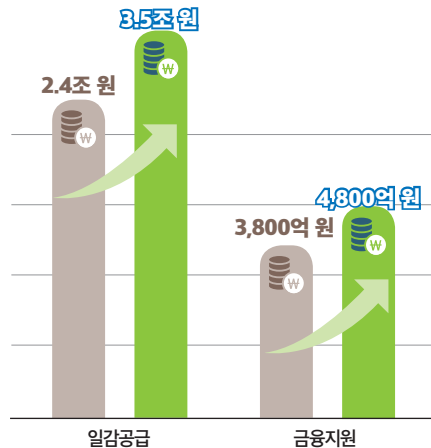


특별금융 프로그램 신설

- 저금리 (3~5%대의 저금리 대출)
- 신용 대출
- 심사기준 완화

1차분(3월 31일): 500억 원 규모 자금 대출 시작
2차분(8월): 1,500억 원 규모 대출 추가 시행 예정

원전 생태계 일감·금융지원 확대



13년 만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이집트 엘다바 3조 원 수주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수주로 원전수출 모멘텀 강화

폴란드 투자이행서(LOI) 체결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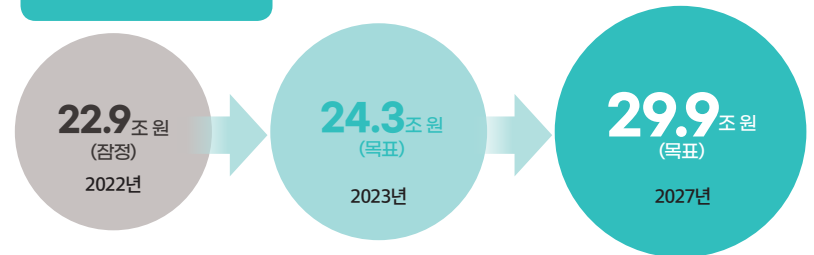


한국이 최초로 수출(2009년)한 해외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사막의 기적'이라 불림

4년후 청사진

원전 활용 확대 및 공급망 경쟁력강화, 해외원전 수주 등을 통한 원전산업 재도약

원전업계 매출액



부동산 시장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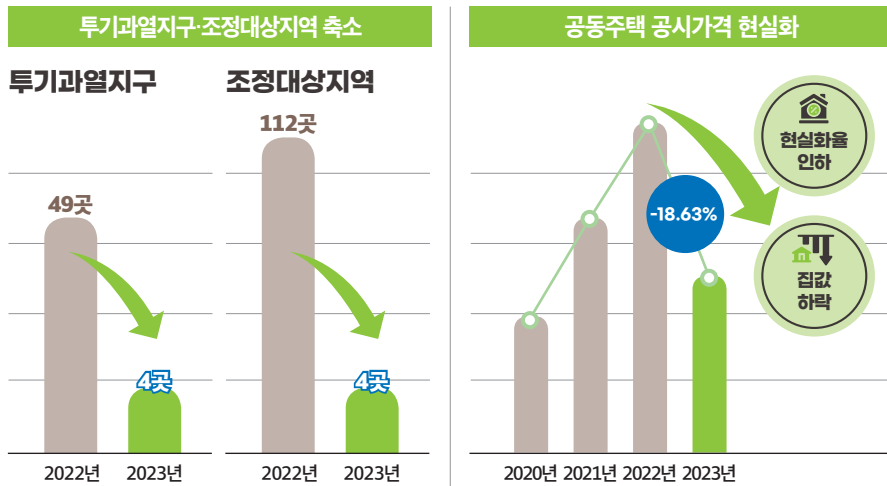
07

“수요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풀어야 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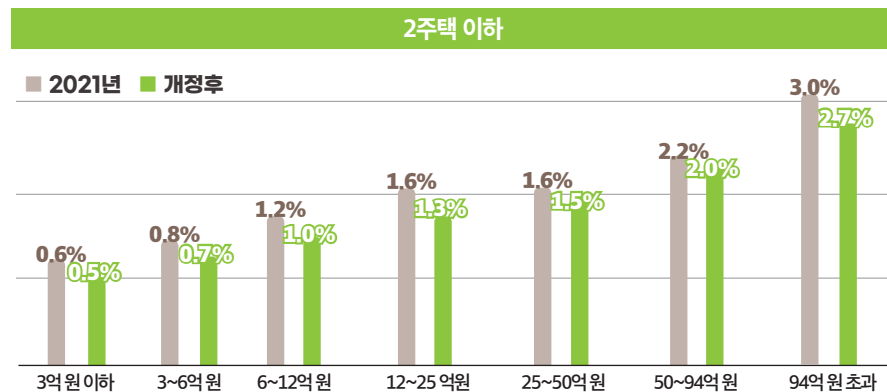
무엇이 문제였나?

▶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로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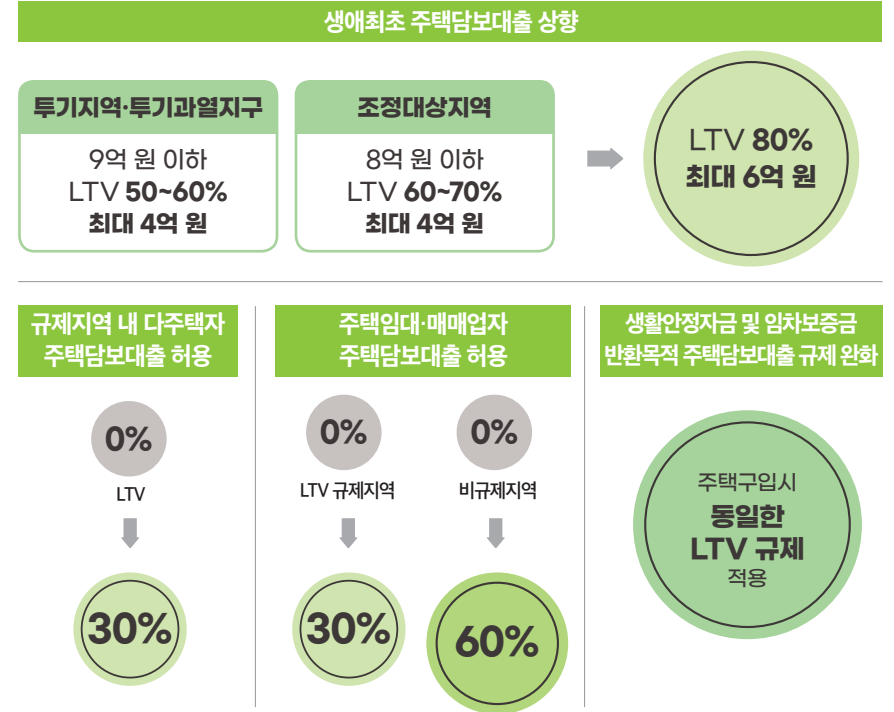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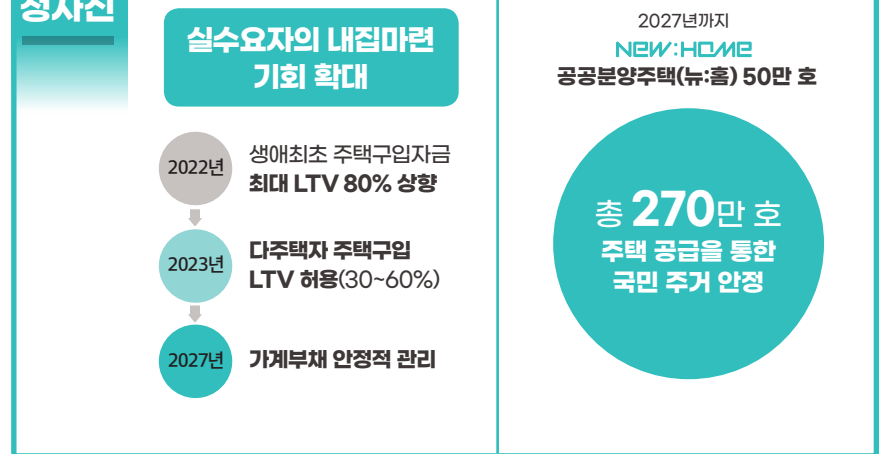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합리화



4년후 청사진



규제개혁

08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입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2.8.26)

오랜 기간 해결 못한 핵심규제 개선

새정부 출범후, 총 1,027건 규제 개선(2023.4월말)
이중 152건 분석결과, **70조 원** 투자 등 경제적 효과 창출

전남 광양제철소 입지규제 완화

신성장산업(이차전지, 수소 등) 입주 허용

4.4조 원 투자 유발,
연간 9천여 명 고용 창출

41년 묵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스크리닝 제도' 도입으로 영향평가 합리화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규제 범위 합리화

일률 500m
→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완화

신기술·신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 선제적 해결

규제샌드박스 주요 성과

전기차 방문충전 등 2022년 228건 승인

투자유치

10.5
조 원

고용창출

1.1
만 명

매출증가

4
천억 원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2019~2022년) 기준

주차방지턱 활용
전기차 충전기



반려견
코주름으로
동물 등록



계단 등
장애물 극복 가능,
자율주행 로봇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신산업
로드맵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로드맵
수립

네거티브
규제 전환

100건의
전환과제
선정,
개선방안
도출

민생·기업 현장 과도한 경제형별규정 개선



식품 자영업자 형별규정 개선

영업자가 폐업 등 경미한 사항
미신고 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형벌 →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형량 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형별규정 개선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자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 원 이하 형벌 →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형벌 부과

현장대기 대형 투자 프로젝트 규제 일괄 해소

< 주요 사례 >

민간투자
18조 원
뒷받침

28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이차전지·
전기차

-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 과천 R&D센터 증설

에너지

-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물류

-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확대
-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4년후
청사진



선진 규제시스템
자유로운 기업투자환경

규제정책 글로벌 선도

OECD 규제정책평가*
세계 3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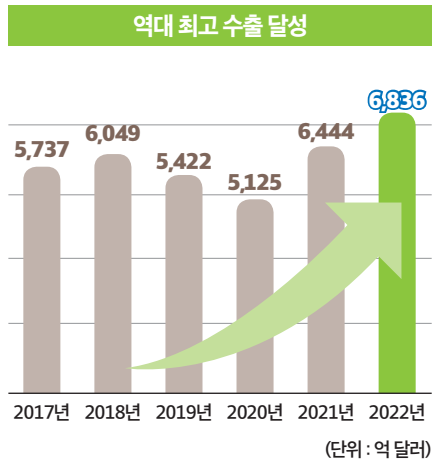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전 분야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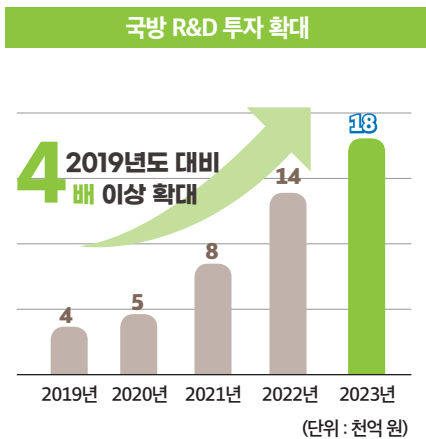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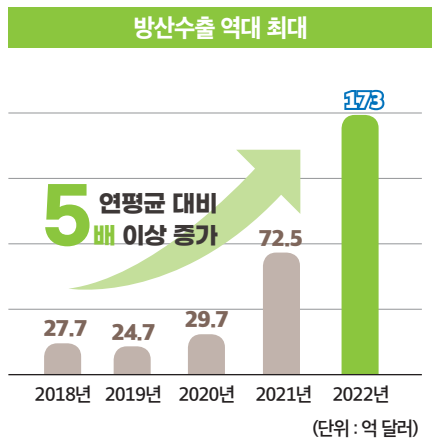
09

“수출과 수주의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뛰었습니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비상한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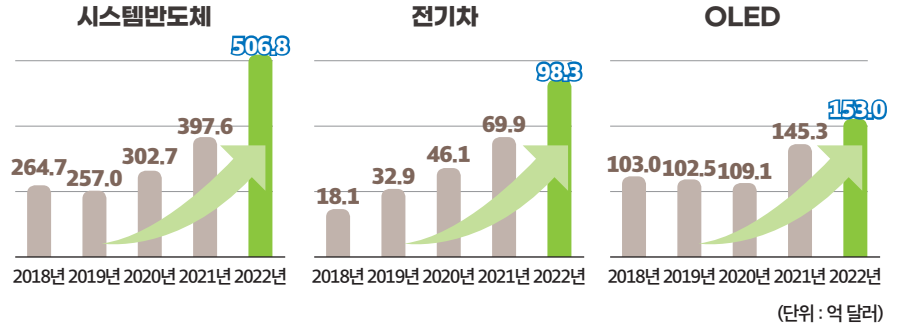
2022년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유망품목 수출 견고한 증가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원전

3조 원 규모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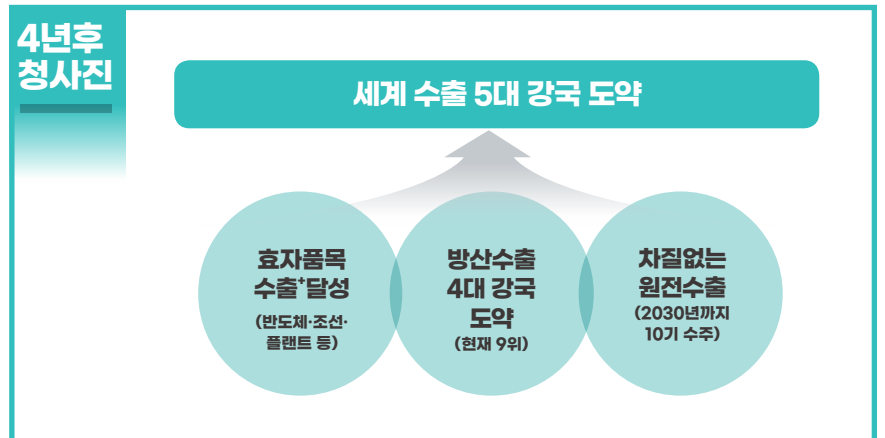
방산

K2 전자 등
역대 최대 규모 수주액
(173억 달러) 달성

플랜트

정유, 가스,
담수플랜트 등
242억 달러 수주

4년후 청사진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10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으로 일자리·민생과 직결, 입지·R&D·인력·세제 등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202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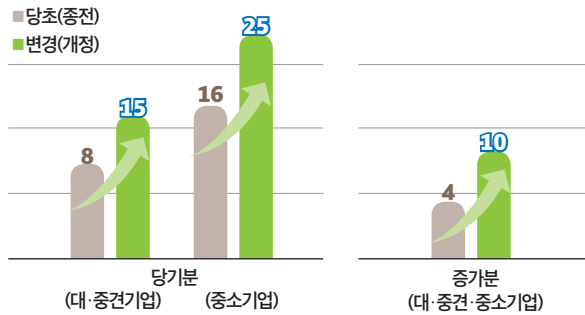
첨단전략산업 총력지원

지원체계 구축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시행 (2022.8월)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 출범 (2022.11월)

반도체 등 시설투자세액 공제 상황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투자공제율 (단위 :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본격화 → 투자특국(投資特國) 조성

-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 투자 (2022~2026년)
-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가 R&D 38조 원(2027년))
- 혁신인재 22만 명 양성(~2032년)
-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 튼튼한 생태계 구축(산업공급망 3050)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4대 전략 추진

투자 촉진	인재 양성	기술 경쟁력	소재·부품·장비 기반
2026년까지 투자 340조 원 5년간 설비투자, 기술개발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5만 명 +α 양성 정원확대 4.5만 명 산학협력, 융합전공 등 10.5만 명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 +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시장선도형 기술개발로 전환 + 소·부·장기업 성장 기지 구축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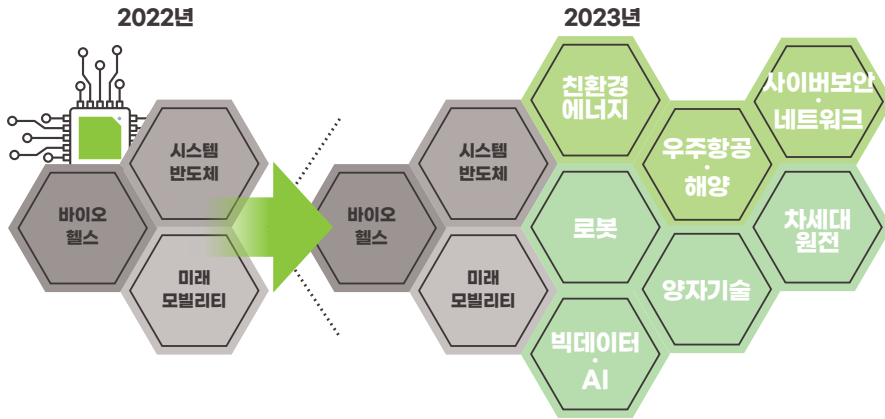
11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3년 대통령 신년사, 2023.1.1)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전방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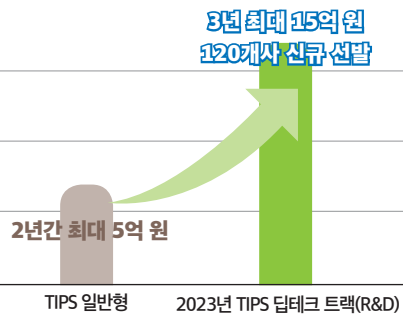
초격차 신산업 지원분야 확대(총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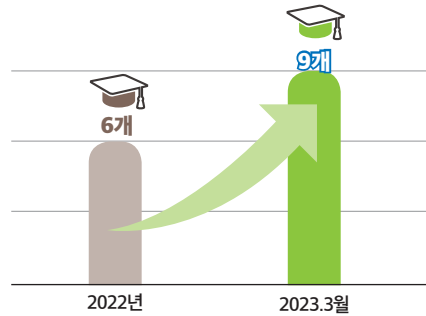
사업화 자금 지원
(10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신규 선발 15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스케일업 25개사 * (2년간) 총 10억 원)

팁스* 딥테크 트랙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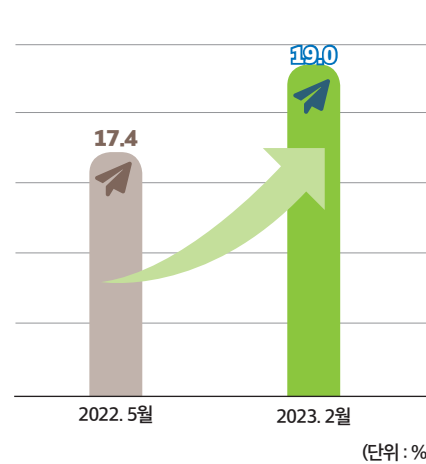
창업중심대학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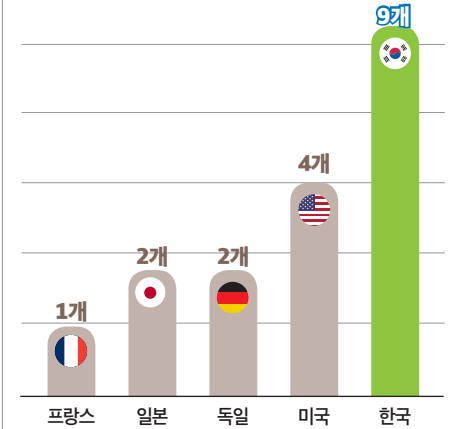
* 팁스: 민관 협력 창업자 육성사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기술창업 비중 확대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혁신상 최다 배출



4년후 청사진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2027년까지 해외진출 창업기업 5만 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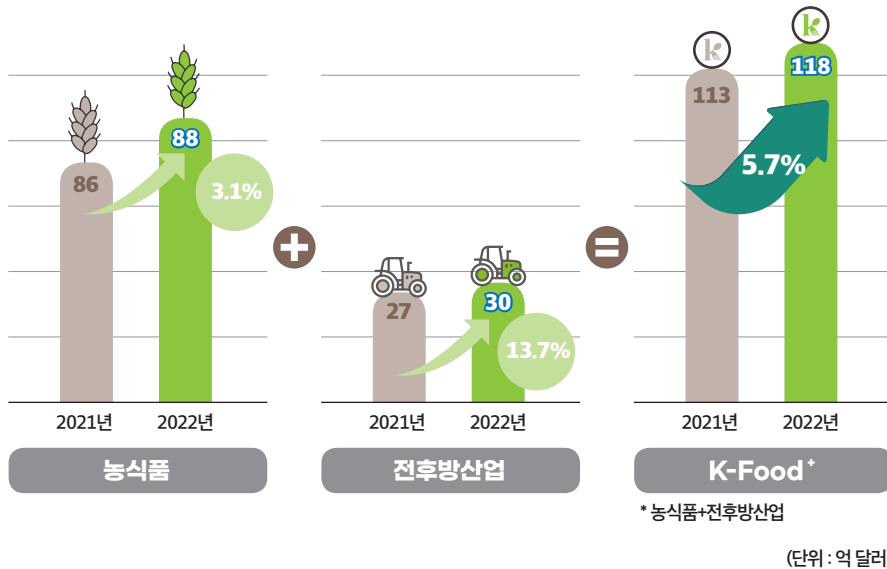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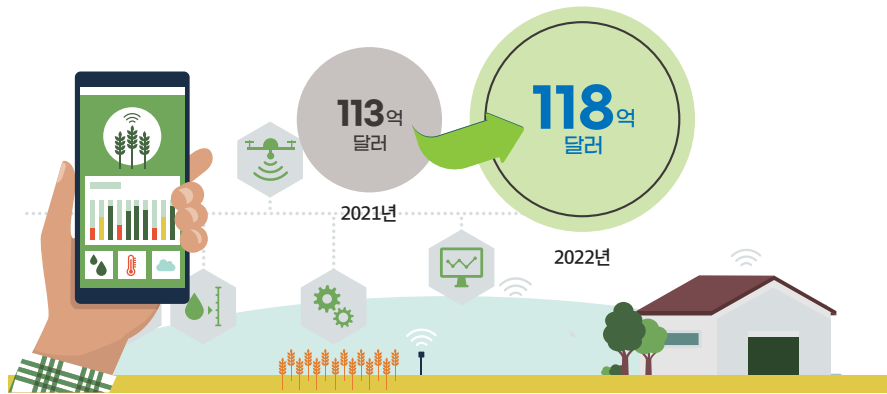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12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4)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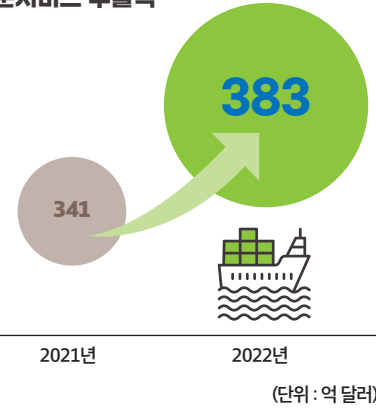
2022년 K-Food+ 수출 최대실적 달성



해운산업 지표 역대 최대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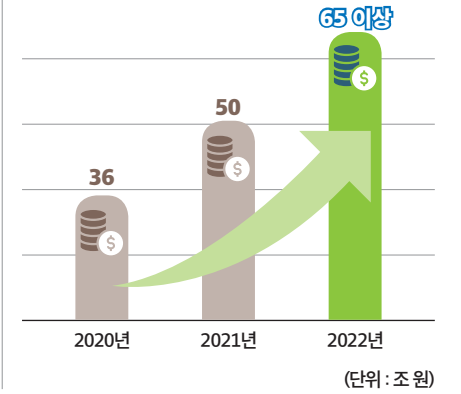
해운서비스 수출액 최대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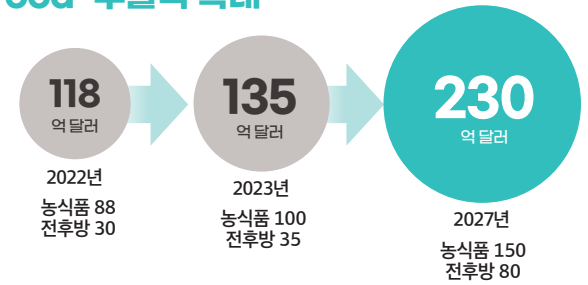
국적선사 해운매출액 최대 달성

해운매출액



4년후 청사진

K-Food+ 수출액 확대



수출입 물류망 안정적 구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개혁

경제

Ⅲ 사회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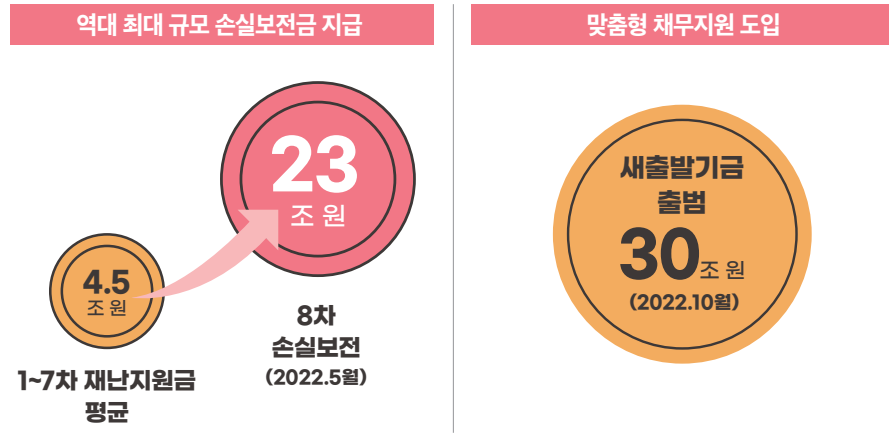
외교
안보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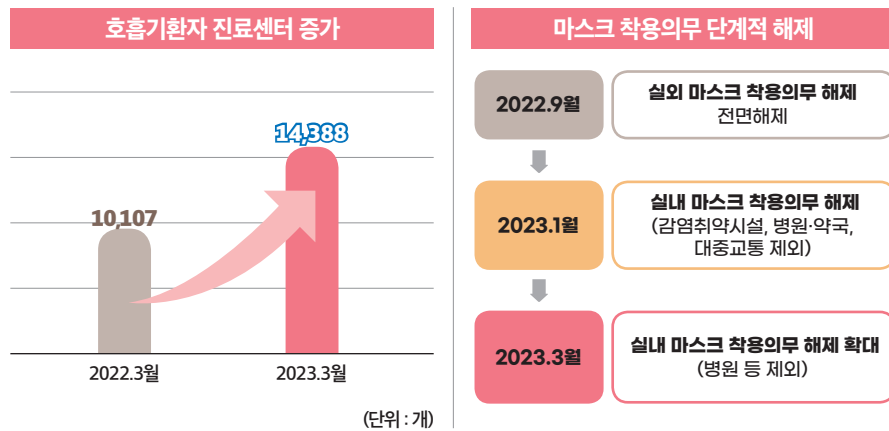
13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본회의, 202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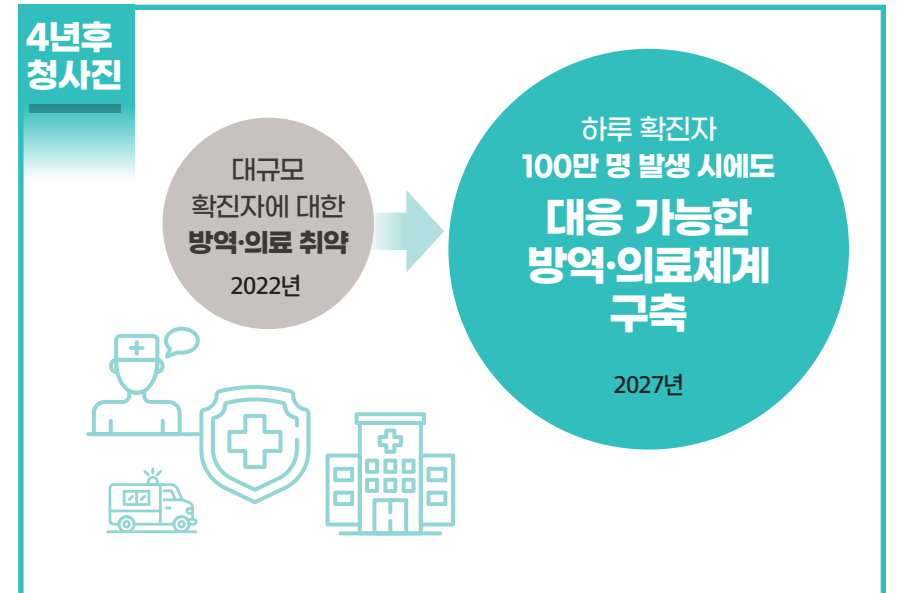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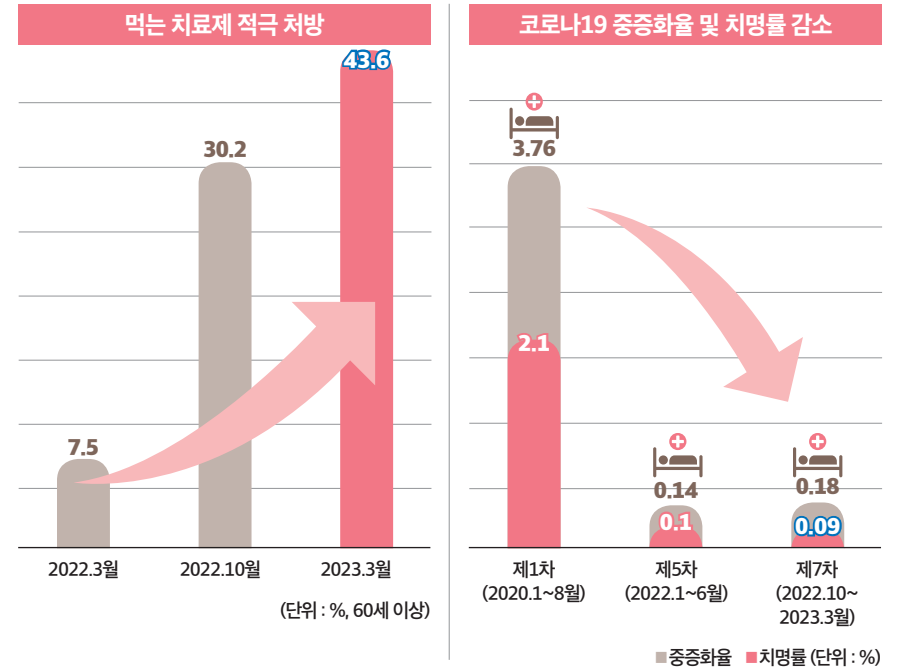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등 맞춤형 채무지원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온전한 일상 지원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 피해 최소화



약자복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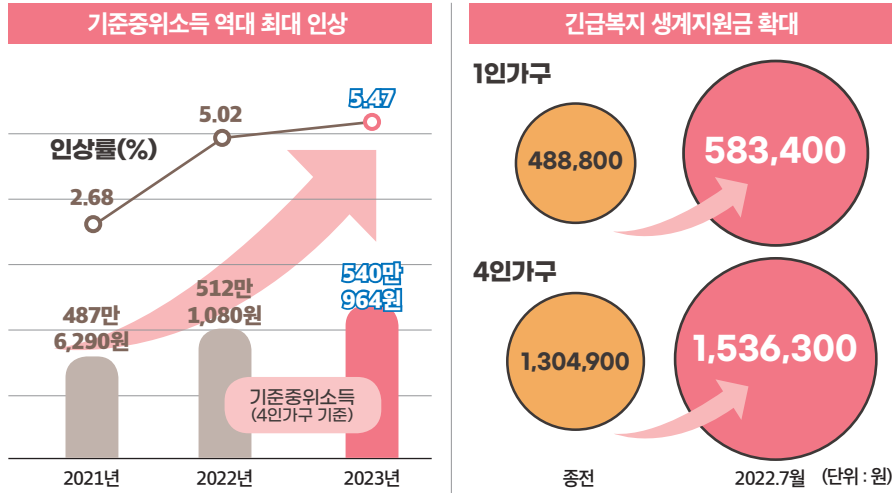
14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복지·노동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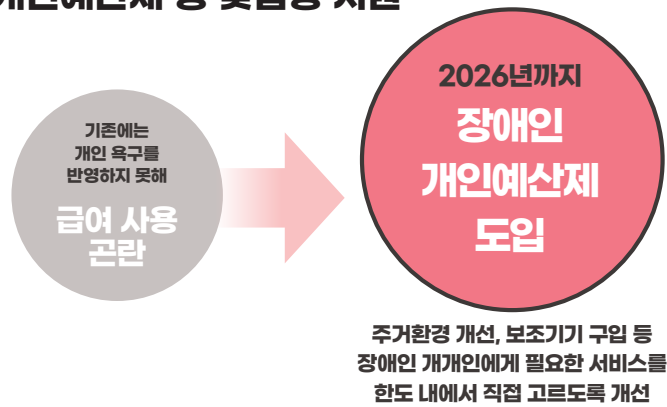
무엇이 문제였나?

▶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지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독거 노인·자립청년·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취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가 절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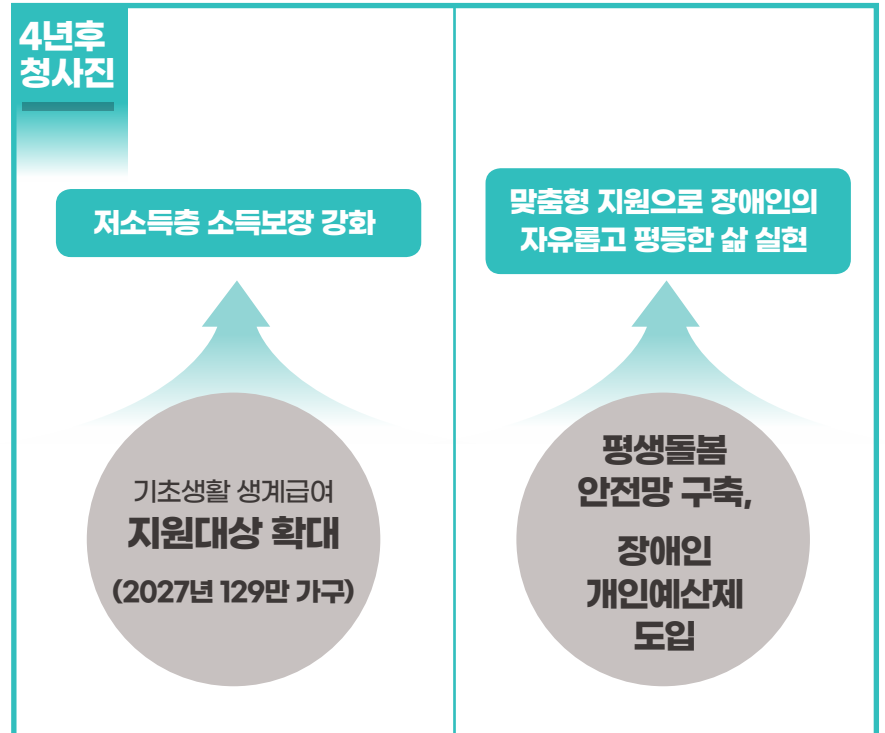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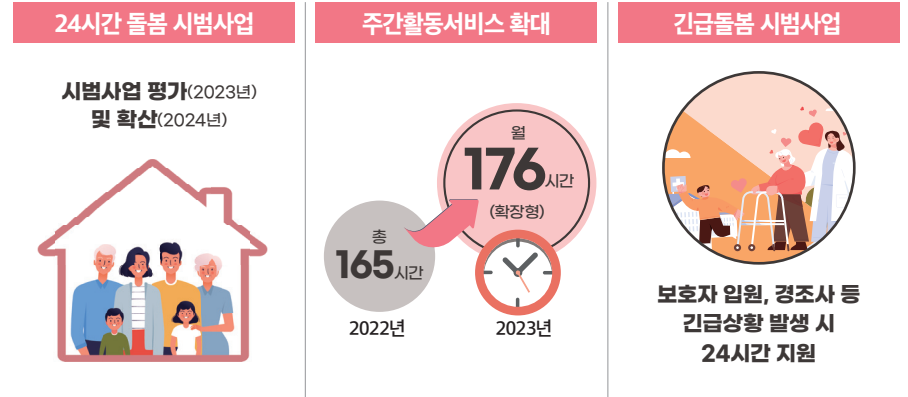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맞춤형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촉촉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5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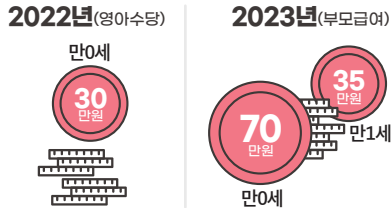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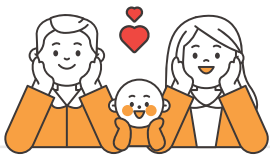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3.28)

무엇이 문제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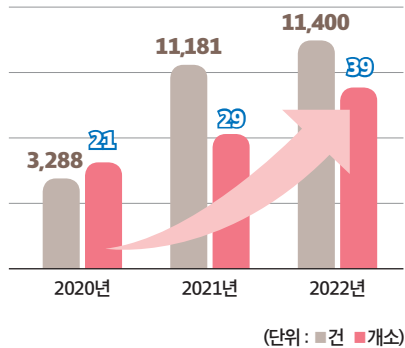
▶ 지난 16년간('06~'21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급감('15년 1.24명 → '22년 0.78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부모급여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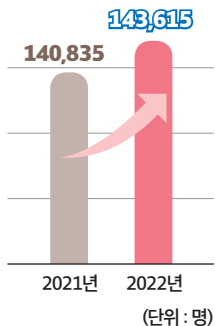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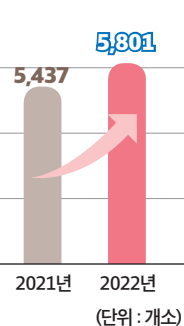


촉촉한 지원체계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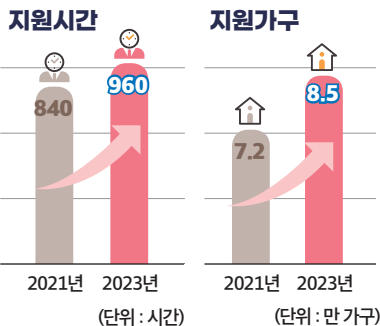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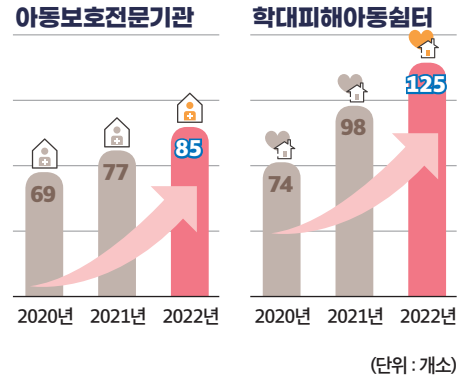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및 지원시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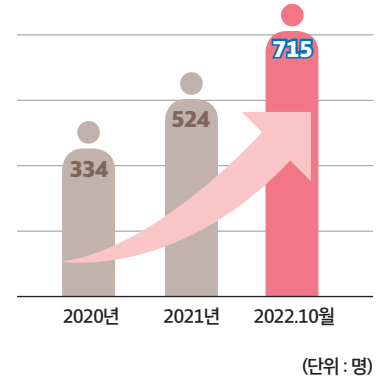


아동권리 중심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지자체 아동보호전문요원 확대



4년후 청사진

부모급여 확대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금으로**
양육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00개소 신규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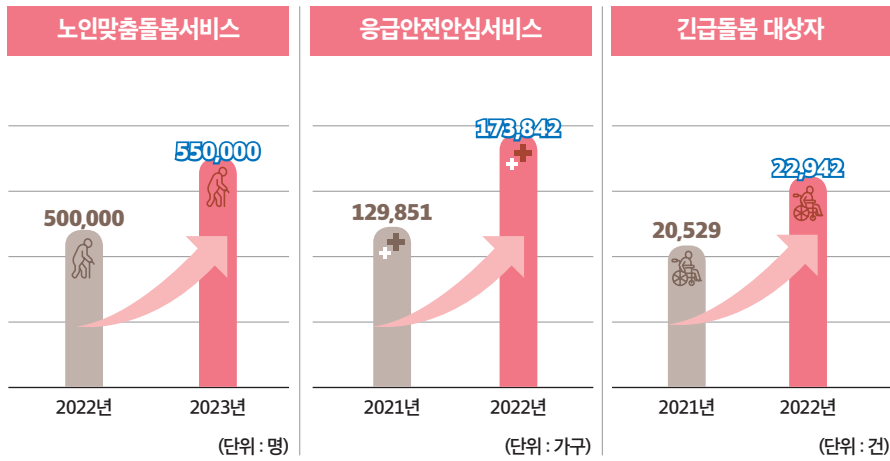
공공보육이용률
50%

사회서비스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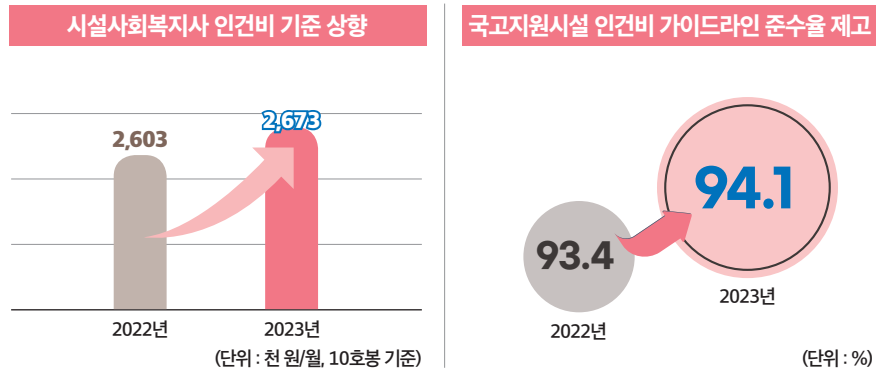
16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지·노동 현장중사자 초청 오찬, 2023.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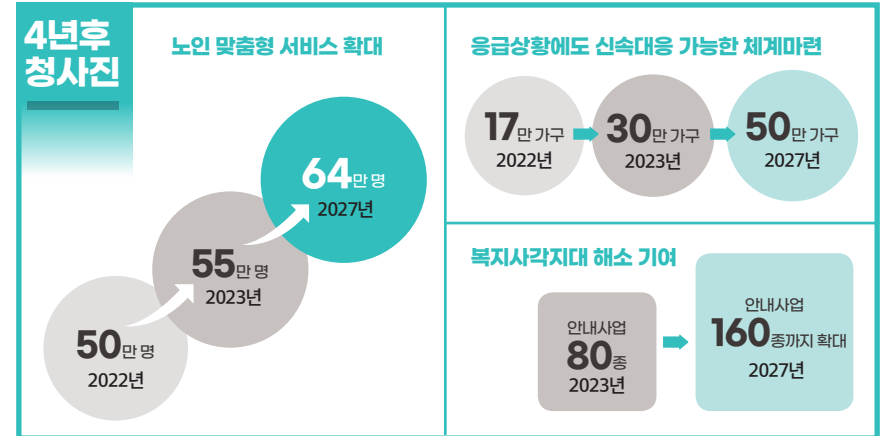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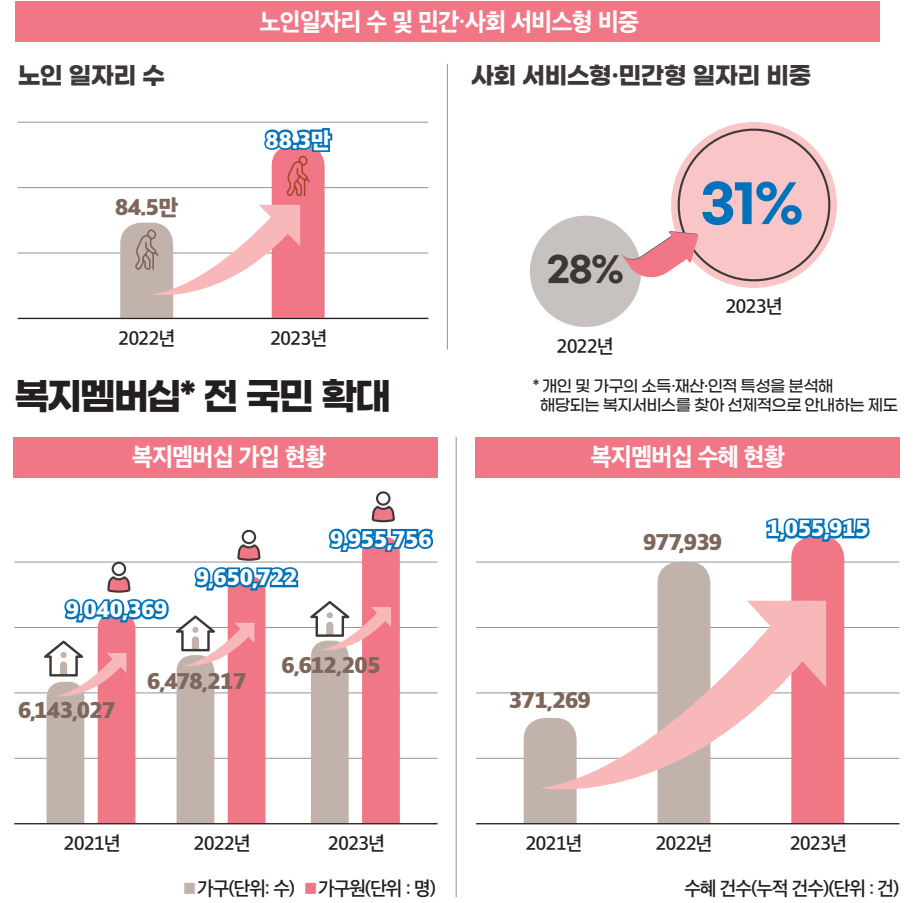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 지속 확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필수의료 기반 강화

17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등 공공정책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방문, 2023.2.23)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강화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환자 적정 이송병원 선정 지체 수술의사 없어 어려 병원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실 가용병상 및 진료가능 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119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 일치로 적정병원 이송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응급처치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범위 확대

현행	개선
<p>지원 기준</p> <p>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5% 초과 시</p>	<p>지원 기준</p> <p>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2023.1.1일 시행)</p>
<p>대상 질환</p> <p>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p>	<p>대상 질환</p> <p>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2023.3.28일 시행)</p>
<p>지원 한도</p> <p>연 3천만 원</p>	<p>지원 한도</p> <p>연 5천만 원 (2023.5월 시행 예정)</p>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 완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적용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p>소득, 재산, 자동차</p> <p>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p>	<p>초과 소득 3,400만 원</p> <p>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p>	<p>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p>
<p>소득, 재산, 자동차</p> <p>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p>	<p>초과 소득 2,000만 원</p> <p>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p>	<p>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p>

4년후 청사진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p>8개소 (2022년) → 10개소 (2023년) → 12개소 (2027년)</p>	<p>10개소 (2022년) → 14개소 (2027년)</p>	
<p>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p> <p>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감소</p> <p>6.2% (2022년) → 6.1% (2023년) → 5.6% (2027년)</p>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18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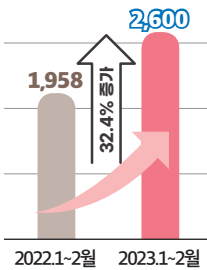
무엇이 문제였나?

▶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되는 등 심각한 범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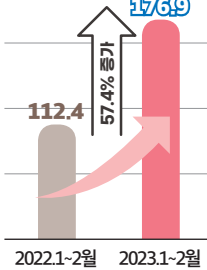
일상생활에 파고 든 마약범죄

마약사범 검거 추이



(단위: 명)

마약류 압수량 추이



(단위: kg)

범정부 총력 대응

유입 감시	국경 밀반입 원천 차단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
유통 단속	검·경·관세청 등 범정부 수사역량 결집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840명) 인터넷 마약거래 24시간 감시
사법처리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치료·재활	민·관 재활시설 확충 통한 정기치료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 엄단

전담수사조직 부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 출범
(검·경, 국제청 등)

2021년도 피해금액

7,744억 원

2022년도 피해금액

5,438억 원(-30%)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미흡

처벌 및 재발방지 강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 스톱킹 처벌 제한

처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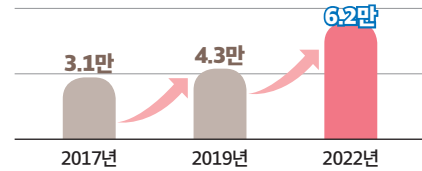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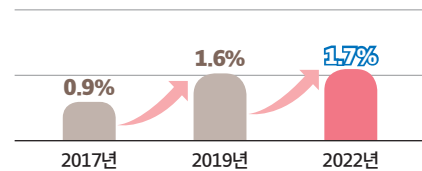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추이

학교폭력 발생 건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피해응답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조치기록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수시·정시에도 반영)

가·피해학생 즉시처리 기간(3일 → 7일)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303곳 → 400곳)

4년후 청사진

마약사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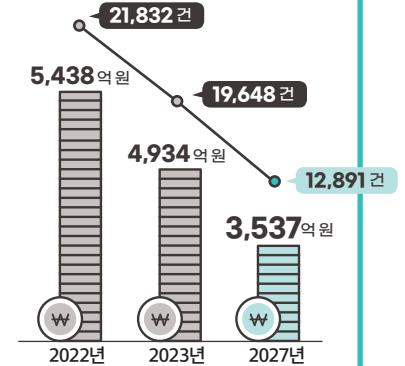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이내인 경우 통상 '마약청정국'으로 불림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피해금액 및 건수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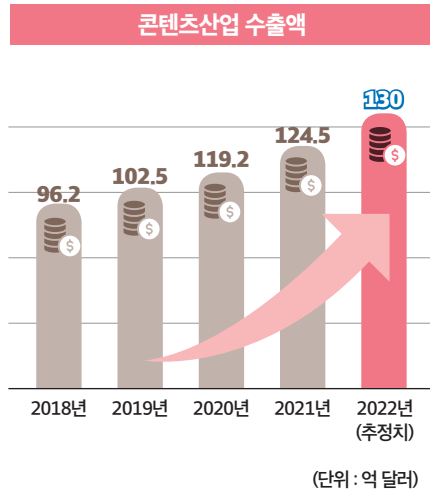
무관용원칙, 피해학생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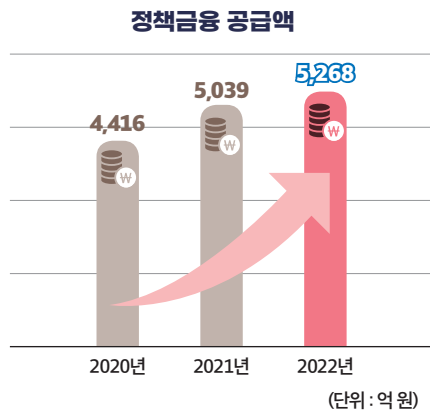
19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 K-콘텐츠를 수출동력으로 키워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및 연관산업 수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및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세계적 K-컬처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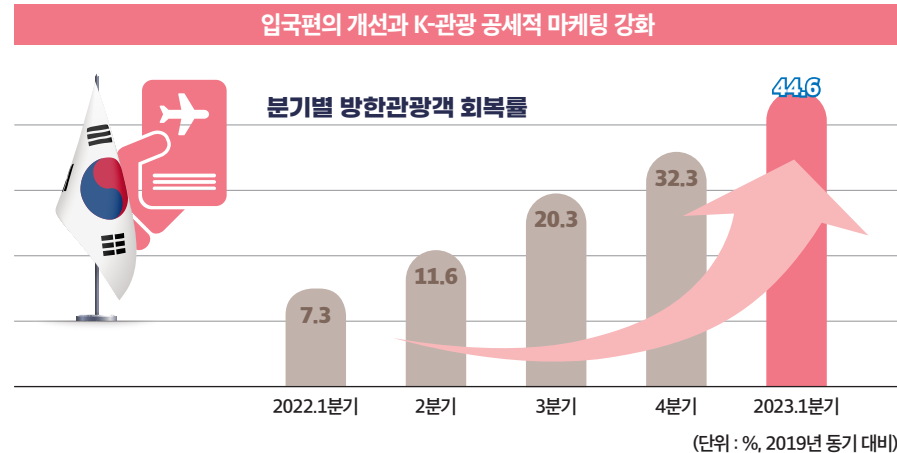
K-컬처와 연계한 ‘한국방문의 해’ 추진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2022.12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K-관광 국제로드쇼 (연중 15개 도시)

청와대 관광 랜드마크화 추진



4년후 청사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2021년: 124억 달러 2023년: 157억 달러 2027년: 250억 달러

방한외국인 관광객 수

2022년: 320만 명 2023년: 1,000만 명 2027년: 3,000만 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개혁

경제

사회

IV 미래

외교
안보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20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0.28)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동맹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2022.10월)

혁신 선도	미래 도전	필수 기반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핵심소재부품 의존도 완화	민간협업 시장 스캐일업 및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	공공주도 핵심원천기술 고도화, 타 전략분야 융합·활용에 민관 역량결집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

AI	한-캐 AI 협력 MOU 체결 (2022.9월)
우주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양자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바이오	한-미 첨단 바이오 연구협력 MOU 체결(2023.4월)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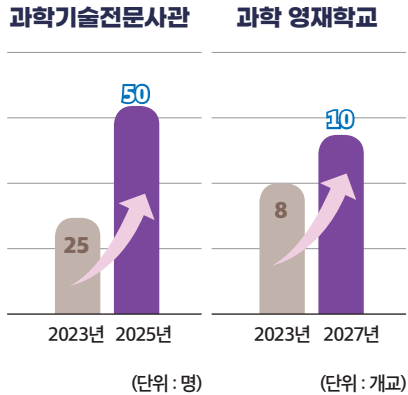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8월)
향후 5년간 100만 명 디지털 인재양성
-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월)
향후 10년간 15만 명 반도체 인재양성
-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023.4월)
향후 5년간 11만 명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5대 핵심분야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과학영재학교 확대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늘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2022.6월)



다누리 달 궤도 진입(2022.12월)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2022.11월)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 발표(2023.4월)



4년후 청사진

2027년까지 세계최고수준*
초격차 기술 6개 확보

*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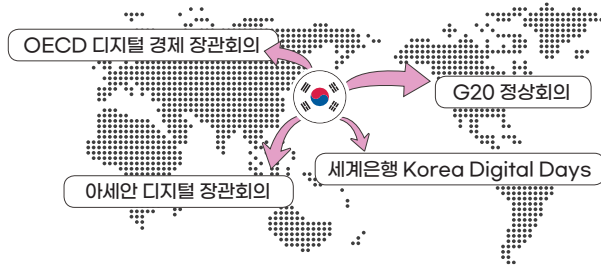
글로벌 7대 우주강국 시대 견인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21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합니다.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 구상, 2022.9.21)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주도



뉴욕구상+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 실현
-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
- 디지털 시대 모범국가로서 성과를 세계와 공유

초거대 AI 경쟁력 향상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023.4월)

국내 인공지능 산업 비약적 성장



규제혁신을 통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전략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전기차, 사물인터넷 등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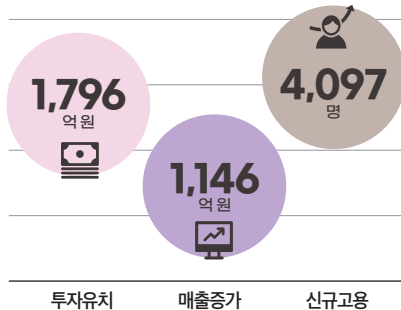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개인정보를 자신의 자산으로 맞춤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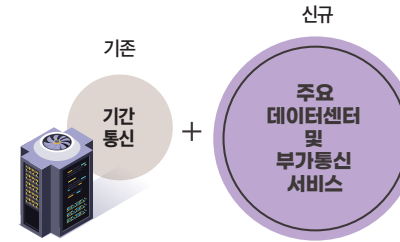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2022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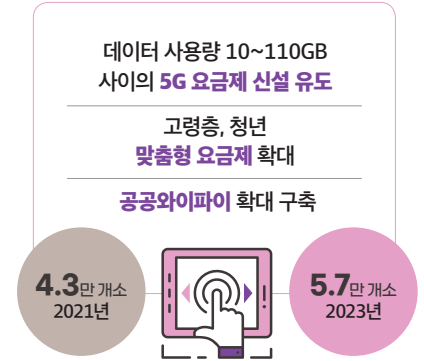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및 디지털 접근권 제고

디지털 재난 관리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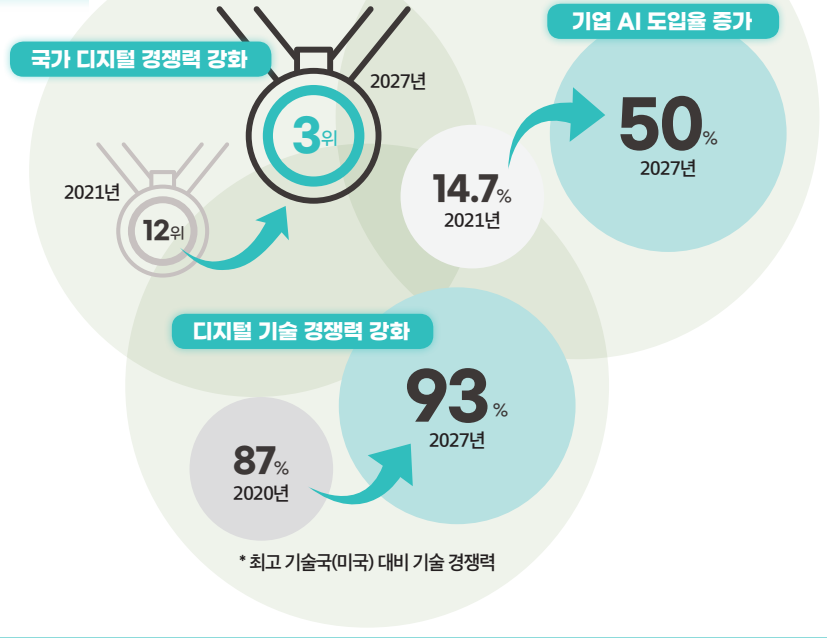


디지털 접근권 제고



4년후 청사진

디지털 심화시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무회의, 2022.10.11)

무엇이 문제였나?

▶ 일자리와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되면서 청년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며 청년의 미래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청년참여 대폭 확대

<p>정부위원회 제도 개선</p> <p>모든 위원회에 원칙적 청년 위촉 의무화</p> <p>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 위촉 의무화</p>	<p>청년보좌역·자문단 신설</p> <p>9개 중앙행정기관</p> <p>청년보좌역 신규 채용</p> <p>2030자문단 203명 신규 채용</p>	<p>청년인턴 채용</p> <p>중앙행정기관 2천 명 신규 채용</p> <p>공공기관 1.9만 명 → 2.1만 명 확대</p>
--	--	---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p>공공주택 뉴·홀 청년대상 공급 규모</p> <p>34만 + 24만</p> <p>58만 2027년</p> <p>공공분양 공공임대</p>	<p>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p> <table border="1"> <tr> <th></th> <th>기존</th> <th>현재</th> </tr> <tr> <td>디딤돌 주택구입</td> <td>생애최초 2.5억 원 신혼부부 2.7억 원</td> <td>생애최초 3억 원 신혼부부 4억 원</td> </tr> <tr> <td>버팀목 전세자금</td> <td>청년 0.7억 원 신혼부부 2억 원(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td> <td>청년 2억 원 신혼부부 3억 원(수도권) 2억 원(비수도권)</td> </tr> </table>		기존	현재	디딤돌 주택구입	생애최초 2.5억 원 신혼부부 2.7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0.7억 원 신혼부부 2억 원(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청년 2억 원 신혼부부 3억 원(수도권) 2억 원(비수도권)
	기존	현재								
디딤돌 주택구입	생애최초 2.5억 원 신혼부부 2.7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0.7억 원 신혼부부 2억 원(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청년 2억 원 신혼부부 3억 원(수도권) 2억 원(비수도권)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p>청년도약계좌 출시</p> <p>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p> <p>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p> <p>만기 5년</p> <p>정부기여금 최대 144만 원</p> <p>2023.6월 출시예정</p>	<p>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p> <p>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시, 근로소득장학금 10/30만 원 지원</p> <p>2022년 4.2 → 2023년 8 (단위: 만 명)</p>
--	--

4년후 청사진

청년 참여 청년정책 구현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확대

청년 주거안정 실현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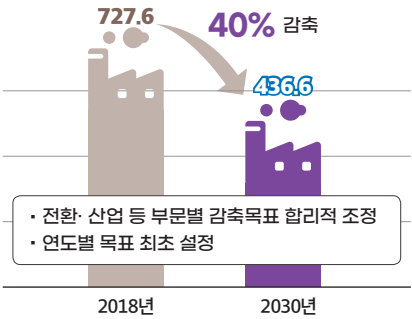
“기후위기는 전세계 공통의 언어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실현을 위해 원전, 수소, 무탄소전원으로 비중을 높여나가고 탄소포집기술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2023.4.20)

무엇이 문제였나?

▶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 현장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념화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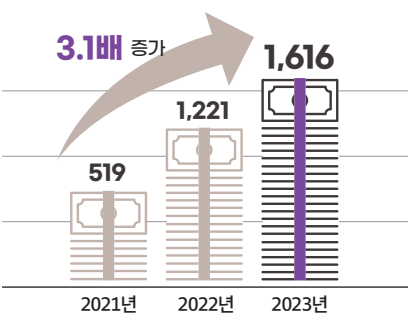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 최초 수립 및 재정투자 확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3. 4월)



(단위 : 백만 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대폭 확대



(단위 : 억 원)

탄소중립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

민간주도 기술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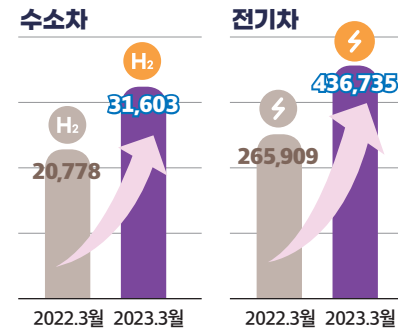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에너지 전환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SMR 등 29개 내외	산업 친환경 연·원료 대체, CCUS 등 48개 내외
건물&환경 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를 저감 소재 등 14개	수송 차세대 전지, 구동기 효율화 등 9개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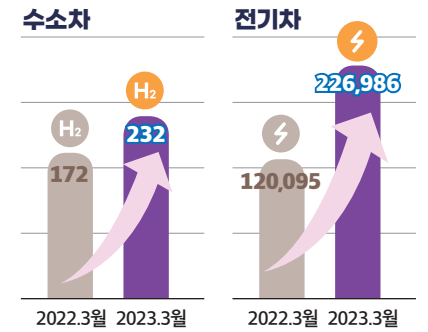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단위 : 대)

수소차·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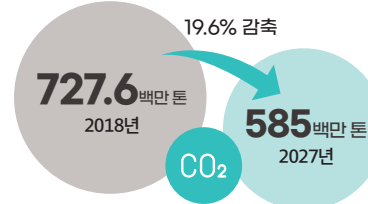


(단위 : 기)

4년후 청사진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투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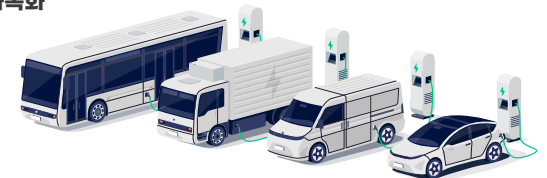


탄소중립 기술수준 격차 감소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

수송부문 탄소중립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전환 가속화

2027년까지 200만 대 보급예정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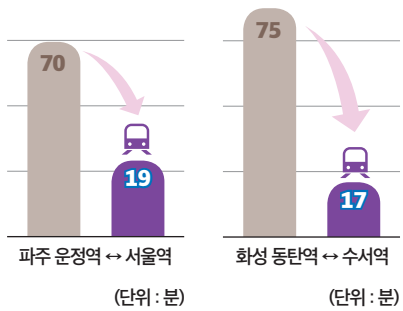
2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개통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다른 노선들에 대해서도 일정을 최대한 당기길 바랍니다.” (2022년 업무보고, 2022.7.28)

GTX 적기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불편 최소화

GTX-A 개통에 따른 절감시간

2024년 GTX-A 노선 개통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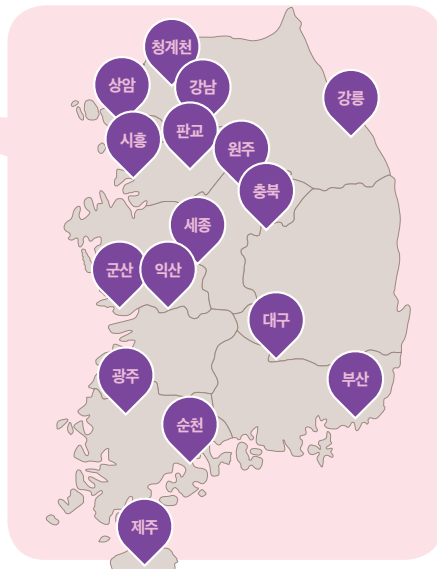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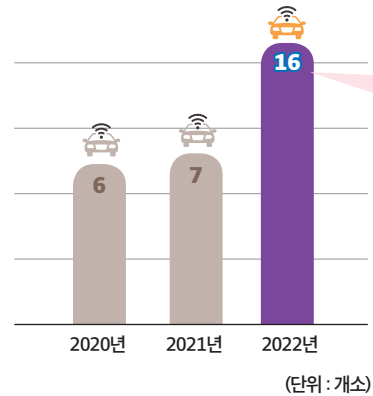
GTX 사업 추진 계획

- GTX-A(운정~동탄) : 2023.4월 시험 운행 본격 실시, 2024년초(동탄-수서)부터 단계별 개통
- GTX-B(인천대입구~마석) : 2024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 계획
- GTX-C(덕정~수원) : 2023년말 착공, 2028년 개통 계획
- 신규노선 : D-E-F 신설 등 2기 GTX 조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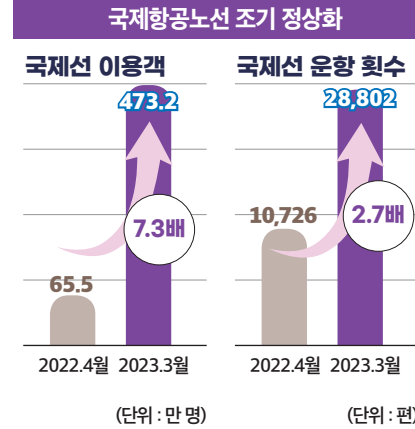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가속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및 영호남 공항 신설 특별법 제정



지방 항공교통 거점 확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개항 및 광주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4년후 청사진

GTX 현실화로 출퇴근 30분 시대 본격 개막

2025년 자율주행 버스 최초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

2025년 서울 도심항공교통 일부노선 상용화

2026년 전국 확산 서비스 다원화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25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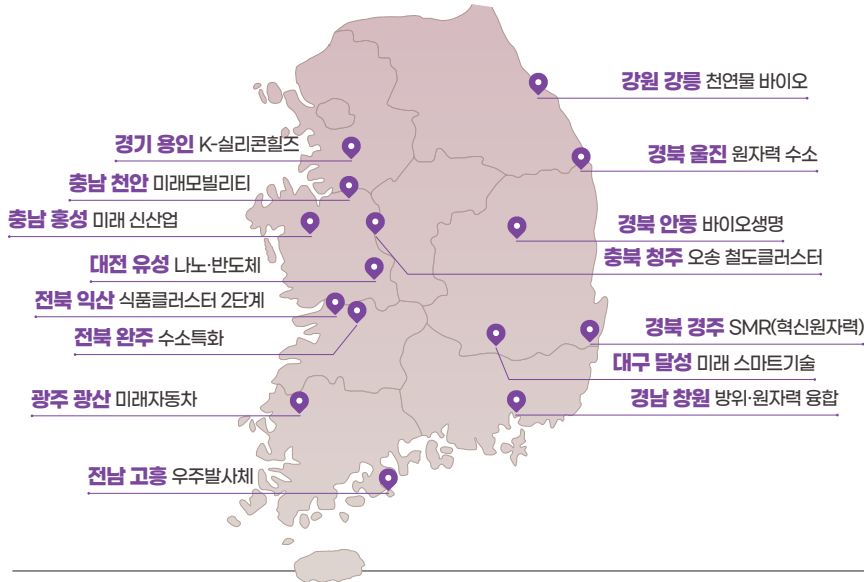
무엇이 문제였나?

▶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으로 지방 스스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구조적 한계가 많습니다.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추진(6개 분야 57개 과제)

국토 (12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	산업 (22개)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한 등	고용 (8개)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등
교육 (4개)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	복지 (7개)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제도 (4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시·도별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주민복지 증진	기부자 세액공제 답례품	지역생산자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경쟁력 강화
	※ 2022년은 준비기간 등 고려, 7,500억 원 지원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통합

	기존	개선(예정)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직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4년후 청사진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2022년 50.5%)
-------------------------------------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개혁

경제

사회

미래

V 외교
안보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26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입니다.” (국빈 방미 공식환영식, 2023.4.26)

무엇이 문제였나?

- ▶ 글로벌 안보 위기 및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화된 한미 연합연습 등으로 한미동맹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재출발

12년 만에 국빈 형식으로 방미(2023.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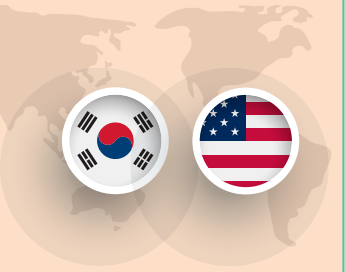
공식 환영식



하버드대학교 연설

핵심성과

- 한국형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 핵협의그룹(NCG) 신설
- 공급망·첨단기술·우주 동맹 강화
* 양국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공조 심화 합의
- 첨단산업 분야 59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및 고위급 전략적 협의채널 복원

- 연합지휘소훈련을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확대·복원
- 정부연습(을지)·연합연습 통합시행(을지 자유의 방패)
- 연합연습 시 실전적 연습시나리오 적용,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경제

국가안보실(NSC) 간 경제안보대화체 출범

→ 반도체·에너지 등 공급망 안정화 논의

안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5년 만에 재개 및 연례화

→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동맹 태세 강화

4년후 청사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주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27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2023.3.16)

무엇이 문제였나?

- ▶ 과거사 문제, 일본 수출규제, 노재팬·협한 분위기 확산 등으로 양국 간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정부 간 교류 채널이 단절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정상 서틀외교 복원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 발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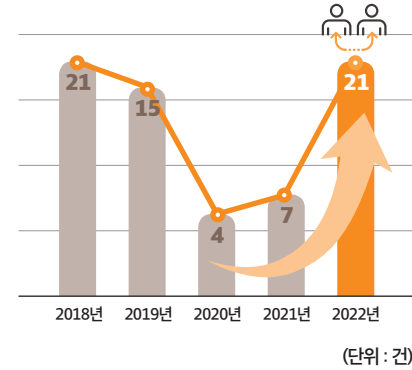


피해자·유가족 만남 및 의견수렴



경색됐던 양국 간 교역·인적교류 확대 추진

한일 간 고위급 교류 규모



일본 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3년 만에 재개



4년후 청사진

안보·경제·문화 등 전분야 교류협력 확대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이익 증진 및
세계평화 기여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28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2.9.21)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외연 확장

나토(NATO) 정상회의(2022.6월)
역대 대통령 중 첫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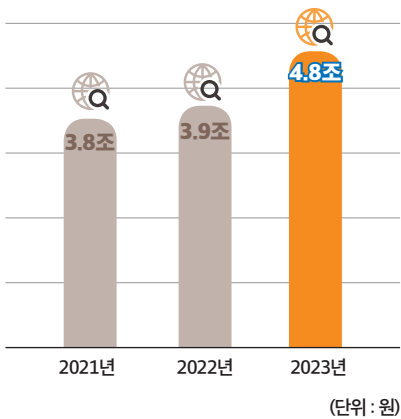
유엔총회 기조연설(2022.9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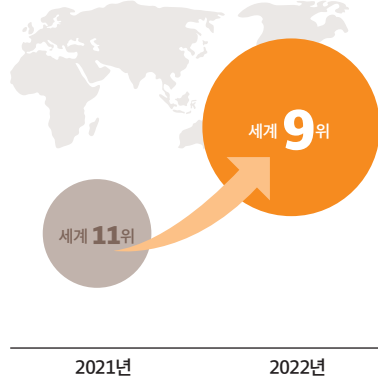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ODA 규모



유엔 정규 예산분담 증액

193개 회원국 중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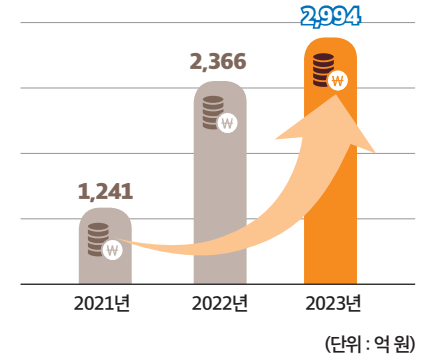
해외재난 긴급구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및 의약품 등 긴급구호물품 조달 지원

주요 기업·종교계·지자체 등 구호금 모금



인도적 지원 예산 증액



4년후 청사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기여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군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2022.10.1)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국방혁신 4.0」 추진

국방혁신 4.0 주요 내용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R&D·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국방개혁 2.0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인식

상비병력 및 부대 감축 등 양·규모 축소 추구

국방혁신 4.0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인식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력 중심의 질적 향상 추구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한국형 3축체계

킬체인(Kill Chain)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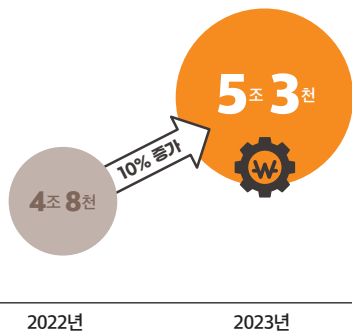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 방호

대량응정보복(KMPR)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 대량 응징·보복해 파괴

한국형 3축체계 예산



(단위: 억 원)

장병 사기·복지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8,790원 2021년 → 11,000원 2022년 → 13,000원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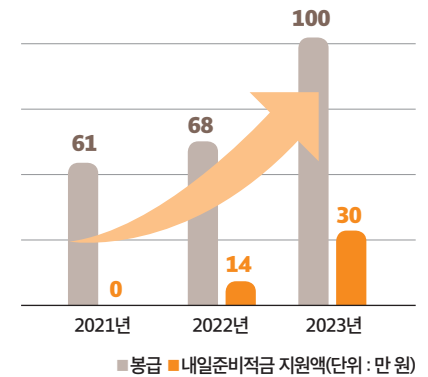


피복 모포·포단 → 상용이불



병영 생활관 8~10인실 → 2~4인실

병사 월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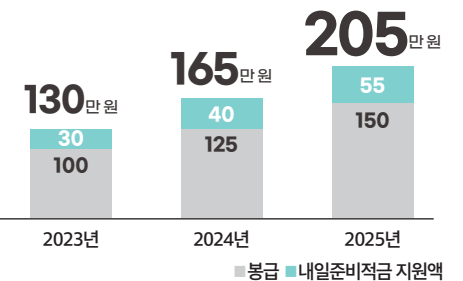
4년후 청사진

한국형 3축체계 강화

2027년까지
3조 1,000억 원
투자 확대

병사 월급 인상(병장 기준)

2025년까지 병사월급(병장기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30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공개 서명식, 2023.3.2)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100여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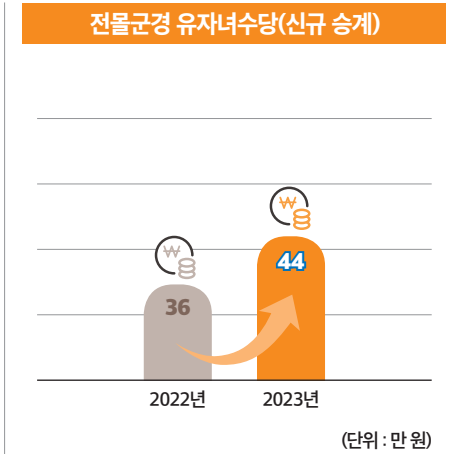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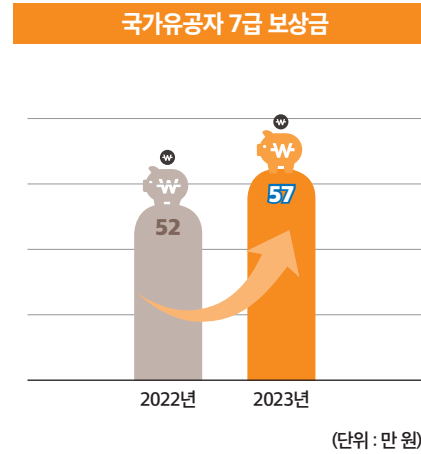
이한호·홍재하 지사 유해봉환(2022.11월)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2023.4월)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이상 인상



4년후 청사진

생활조정수당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중증장애인 수급자 +3,580명 수혜 (2023년)
- 노인 수급자 +10,140명 수혜 (2024년)
- 전면 폐지 (2025년)

위탁병원 지정 확대

-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
- 640개소 (2022년)
- 1,140개소 (2027년)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충

- 연천현충원 조성 등 2025년까지 18만기 확충을 통해 안장 수요에 적기 대응
- 18만기 확충 (2025년 까지)

